

부실시공 무관용...3명 이상 사망시 건설업 등록 말소

국토부 붕괴사고 재발 방지안 마련...심각한 인명피해 땀 정부가 직권 처분 일반인 3명·근로자 5명 이상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부실시공 처벌수위 대폭 높이고 감리제도 내실화·시공 품질관리 강화도

광주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부실시공으로 심각한 인명 피해(3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10명 이상 부상자 발생,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 필요)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처분 권한을 관할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직접 가져와 직권으로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으로 ▲무관용 원칙 대응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시공 품질 관리 강화 등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내놨다.

◇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정부의 부실시공에 대한 엄정대응의 주된 골자는 정부가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위임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숨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 사고 발생하면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철거 현장 붕

괴사고 이후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재발방지책(불법 하도급으로 10년 이내 2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에 이은 것이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이 3명 사망하거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향후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도 병행된다.

손해배상 책임도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확대(최대 3배 이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법률 개정안을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올해 내 개정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 실효성 있는 감리제도 조성=감리 전반에 걸쳐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보완하고 정부와 인허

가 관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감리제도를 정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 대해서는 감리에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로 인한 발주자와 시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감리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감리자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 감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게는 감리 실태 점검·지도 권한을 부여해 고위험 현장에 대한 감리 부실을 감시하는 체계도 만든다.

◇ 꼼꼼한 시공 품질관리 강화=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건설업계의 관행을 개선해

시공품질 관리를 더 강화시킨다.

기존에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무리한 공기와 저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할 수 없었지만, 인허가 단계에서 공기·비용 산정에 대한 관계 기관(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한다.

시공사가 건설기계 업체와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설기계 업체가 시공인력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 관행을 개선해 원청인 시공사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그동안 지적돼 온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공공공사에만 활용되던 표준시방서를 민간공사에서 확대 적용하며, 시멘트 품질 관리를 위해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공장별 A~E등급)를 도입해 불량 레미콘 생산·유통을 차단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김광남 수사부장이 화정아이파크 붕괴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화정동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소환키로

광주경찰청 중간수사 결과 발표 품질관리원 6명 아닌 1명만 배치

경찰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소환키로 했다.

광주경찰청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8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의 소환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이 화정아이파크 1·2단계에 각 3명씩 총 6명의 품질관리원을 배치해야 함에도, 실

제 근무한 품질 관리자는 1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관리자 인사권의 최종결재권은 현대산업개발 대표에게 있다는 점에서 품질 관리원이 1명뿐인 이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품질관리자의 적절한 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 관리·통제가 부실했고, 결국 붕괴사고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서구청 공무원이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주민 민원을 사전에 현대산업개발 쪽에 알리고 현장점검을 나간 정황을 확인,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아울러 철거업체 대표와 시행사 간부 등을 입건해 철거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수사중이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사실도 확인했다.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현대산업개발과 정식 하청 계약을 맺은 A건설이 아닌, 펌프카업체 B건설 노동자들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8명, 하도급업체 관계자 5명, 감리 3명, 공무원 1명 등 20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 201동 담당 감리자 1명 등 6명을 구속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농번기 외국인근로자 취업 숨통 트이나

농림부, 체류·취업활동 기간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와 농번기를 앞두고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면심의결과에 따라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취업활동 기간을 늘렸다.

이번 조치로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

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됐다.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1월 396명→2월 399명→3월 18일까지 239명)로 돌아서고 있다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올해 입국 인원도 지난 18일 기준으로 총 1034명으로 지난해 연간 전체 입국 인원의 절반을 넘겼다.

한편 농번기 등 농업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3~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86개 지자체에 1만 1472명이 배정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출근길 지하철 시위' 비판에 광주 장애인단체 항의 회견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한 비판과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연다.

출근길 시위는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는 것이다.

28일 광주장애인정책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단체를 향한 비난 대신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고민과 해법을 책임 있게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향해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비판을 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이다.

광주호 호수생태원 나무테크 파손 산책 주민 2m 아래 추락 후 구조

광주시 북구 광주호 호수생태원에서 50대 주민이 난간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5분께 호수생태원 주변을 산책하던 주민 A(50)씨가 나무 테크에 기대는 순간, 난간 일부가 파손되면서 서 버드나무 근처로 추락했다.

테크의 난간 지지대가 헐거워져 부서진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 주민은 별다른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2m 아래로 추락하면서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광주 북부소방서 119구조대는 현장에 출동해 주민을 구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